

건강 칼럼

C형간염 불안감 확산방지 대책 마련 시급

최 근 특정지역 병원 집단 C형간염 집단 감염 발생 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C형간염 검사가 급증하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C형간염 유병률은 전 국민의 약 1%로 추정 하고, C형간염은 주로 주사기 공동사용·수혈·혈액투석·성접촉 등으로 감염되고, C형간염에 감염되면 50~80%가 만성화되고, 20~30%는 간경화로 악화된다'고 설명하고, 간암 및 간경화의 주요원인이 B형 간염은 예방접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C형간염은 예방 백신 등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환자의 80% 이상이 특이 증세가 없어 증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2~2008년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1만 8천명을 대



신승교 순창군보건의로원 의료지원과장

상으로 인지도 조사결과 B형간염 보유자의 74.2%는 발병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C형간염은 34.9%만 병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C형간염 박멸을 위해 일본에서는 40~70대에서 검진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치료율이 높은 DAA 치료제가 시판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화에 따르면 C형간염 조기 박멸을 위해서는 현재 감염된 환자를 찾아내는 스크린 작업을 통해

병의 진행과 전파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C형간염은 초기 증상이 없지만 방치했다가는 간암 위험을 높이는 등 위험한 질환이라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40대부터 C형간염의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B형간염 검진처럼 생애전환기 만 40세 만 66세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으며, 대한간학회에서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형간염 감염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는 검사 대상자가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감염이 의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약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따른 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보도 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특히 순창지역은 C형간염 병원 진료시례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보도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형간염 감염 불안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국가감진사업에 C형간염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선별 검사를 한다던 국가차원에서 C형 간염의 감염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제언

음주운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범죄행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주 운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4621명, 그중에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83명으로 전체 12.6%를 차지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신체나 벌금형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법법과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신체형보다 벌금형 위주여서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시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단속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단속된다

는 인식이 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며, 또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및 최근 5년간 4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자체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통제가 어려운 휴가철이 끝나가지만,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 친지들이 모여 성묘 길에 '술 한 잔 쯤이야'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권혁찬 순창경찰서 순회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한가위 명절 음주운전 더욱더 조심해야

"한가위", "추석"이라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풍요로움과 고향의 향기를 맡게 된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어김없이 "민족의 대이동"이 생중계 되고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성의 즐거움이 사고로 이어져 커다란 슬픔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은 매년 되풀이 된다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위반행위 가운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범죄행위이다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소주세잔을 마시면 괜찮다", "나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단속 수치가 나오나"며 되레 경찰관에게 묻는 경우가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펼치거나 단속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며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요범죄 행위라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문지마 범죄"와 같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상해를 입히는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즐거워 한가위 명절에 고향의 향기를 만끽하고 "음주가무도" 즐기자.

대신 마지막 술잔을 놓았다면 반드시 차량 키도 함께 놓아두자.

김성수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골목 상권 살리기에 진정성 보여야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다. 이달 15일이 추석이니 다들 마음은 이미 추석 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전통 시장에서 물품 구매하기 운동은 도내 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주도적으로 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말할 기회가 있을 터이다. 그래서 오늘은 골목 상권 살리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싶다.

저번에 전북도가 골목 경제를 활성화 방침을 밝혔는데 그 성과가 궁금하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런데 여기 다짐할 것이 있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영세업체들의 형편부터 살펴야 한다. 영세업체들의 형편을 살펴라는 주문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거듭 하는 이유가 있다. 골목 경제 활성화가 추석철을 지나기 위한 말의 선전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말 그대로 골목 경제 살리기에 마음을 둘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영세한 업체 쪽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골목 경제의 주인공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 괴롭히는 일을 방관하거나 조정하는 행태도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도 문을 닫는 업체들이 하나 둘이 아닐 터이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대형 마트들의 독식으로 그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사라졌는가.

도내 시군 지자체가 말 따로 실행 따로의 행정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네 골목 상권을 붕괴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리는 지적이다. 동네 구멍가게인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는 관공인데 골목 경제 활성화 운운은 앞뒤가 맞지 않다.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골목 경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영세한 상인들이 추석 경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호소에 귀를 주지 않는다면 골목 경제 활성화 운운은 설득력이 없는 말장 도로 목이다.

전북도, 인구 감소에 주목해야

전북도는 인구 감소에 주목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보고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작금이다. 도내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거나 이같은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본보가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인구가 줄은 것을 지적했거나 도내의 제반 상황이 안 좋다. 전북도가 전개해온 인구 유입책의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정직해야 한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보고만으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전북 지역은 인구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되었다. 저출산 현상마저 오래돼 도내 신세대들의 수도 줄고 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생은 2365명이 줄었고, 중학생은 5521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1095명이 줄었다. 그나마 다문화 학생이 증가한 덕에 그 정도라는 보도이

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갑지 않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차 많은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말이다. 2020년이면 도내 고등학생이 30%나 감소할 거라는 조사 보고가 저번에 보고됐었는데 전북도의 생각이 어떤 지 궁금하다. 2020년이라면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다. 중학생이 대폭으로 줄었으니 이같은 걱정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남원시의 인구보다 많은 거 말이다.

군내에 읍이 두 개나 되는 완주군이 남원시보다 인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전북도와 남원시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부권의 무주 진안 장수도 물론이다. 일자리 문제며 거주 문제며 교육 문제며 교통 문제 등 골칫거리가 산적해있다면 거주 인구가 불어날 턱이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몸을 옮기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전북도더러 인구 감소에 주목하라는 것은 그래서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